

	보도자료 2009년 11월 17일(화)	작 성	미래비전비서관실
		비서관	김 상 협
		행정관	이 창 수
		연락처	02-770-7306
'09.11.17(화) 10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,
배출전망치 대비 30% 줄이는 것으로 확정
 - 단기적 부담보다는 패러다임 전환과 중장기적 國益 고려
 -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부문 적극감축으로 기업부담 완화
 - 에너지 절약 등 녹색 생활에 대한 全 국민의 동참 호소

□ 이명박 대통령은 11.17(화)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“배출전망치(BAU)대비 30% 감축”으로 최종 결정하였다.

* BAU(Business As Usual, 通常經營推計方式): 특별한 조치(저탄소녹색성장 등)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. 즉,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, 인구변동,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임.

□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, “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”고 말했다.

○ 또한, 이명박 대통령은 “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,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國格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명박 대통령은 “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첫째,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, 둘째,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, 셋째,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○ 이 대통령은 또 “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,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, 녹색습관(Green habit)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”고 강조하면서 “정부·기업·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하였다.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이희성 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.

○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.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, 약 80차례의 산업계·NGO 간담회,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, 지난 11.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% 및 30%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,

- 이후에도 11.12일 경제 5단체와의 협의, 11.13일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GDP 영향,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후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된 것이다.
-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% 감축안은 IPCC¹⁾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(BAU 대비 15~30% 감축)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 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.
- 이로써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“감축목표 금년중 발표” 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.
-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, 단독적인(unilateral) 감축행동에 해당한다.
-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.
-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1)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,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

- 또한,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을 유지·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해, 국무총리실과 녹색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·산업계·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/F를 구성하여 부문별,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,
-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·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(현 위기관리대책회의)가 운영된다.
- 또한, 정부는 주기적·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- ※ 한편,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VIP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전원이 내복 및 스웨터 등을 착용하는 '온(溫)맵시'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